

이슈브리프 18-32

국방수권법 통과가 갖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시사점

ISSUE
BRIEF

2018

08



국가안전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수권법 통과가 갖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시사점

오일석 (신안보연구실)

1. 2019년 美 국방예산 확정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13일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을 확정짓는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the Fiscal Year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국방수권법’이라 함)”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2017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총 7,17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국방부의 예산과 지출을 특정하기 위하여 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은 지난 7월 26일 하원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국방수권법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힘과 新기술에 기반하여 국가안보전략에서 문제 삼은 4개 국가(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에 대한 적극적 견제와 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군대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6,39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아울러 위기대응, 기반보호는 물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지원, 중동과 북아프리카 인권 보호 및 각급 대사관 보안 등 국외 작전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69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의무지출로 89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2. 국방수권법을 통한 국가안보전략 실행

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견제

국가안보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패권, 영향력과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은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군의 현대화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활동 5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지위를 주요 국방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인도와의 방위 및 안보 문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장관의 일정한 허가가 없는 한 중국의 림팩퍼시픽(RIMPAC) 훈련 참여도 금지시켰다.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행동이나 위협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만의 국방 능력과 군 대비태세의 향상을 지원함은 물론 대만과의 합동훈련, 안보협력, 무기판매 및 고위급 군사회담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 수단, 사이버 활동, 세계 인프라 투자와 개발 계획,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활동 등 중국 정부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 부처에 대해 중국 화웨이나 ZTE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여섯째,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중국의 미국 내 미디어, 문화 기관, 기업 및 학계와 정계 등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공자학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중국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방예산 지원을 중단시켰다.

나. 러시아에 대한 억지

국가안보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유럽과 중동의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으로 러시아를 인식하였다. 실제로 푸틴은 금년 4월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우주탐사 및 신무기 개발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억지활동(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대한 63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 활동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유럽 주둔 미군을 증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법은 또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Council) 담당관을 지정하여 미국을 비방하는 각종 캠페인 활동에 대한 전 부처의 대응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러시아의 적대적인 사이버 및 정보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과 관련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대시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 조치

비록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미국 의회는 여전히 북한을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지역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자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버팀목으로서 핵억지 활동을 지속하고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수를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국방수권법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베이스라

인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국무장관 및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가 해체, 파괴 또는 폐기되어 완전히 무용화된 경우, 우리 정부와 합의 하에, 업데이트나 검증된 평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주한 미군의 요청에 따라 저고도 방어 패트리어트와 고고도 방어 사드(THAAD) 미사일의 통합을 위해 2억8천4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육군의 정밀타격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배정을 승인하였다.

국방수권법은 이란과 관련하여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은 이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국방부의 이란에 대한 방어 역량 강화계획을 승인하였고 이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리아, 예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미군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감독 강화, 걸프지역 항공모함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신형 포드급 항공모함 개발 촉진,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과 배치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동북아 외교·안보전략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국방수권법 통과로 미국은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힘에 의한 견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미국은 막대한 국방예산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진출을 강화할 경우 미국의 개입과 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및 대만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극도의 긴장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사이버공격, 인공지능, 새로운 핵무기 등 신기술 개발에 국방예산의 투입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 또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에 맞서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와 연대하고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 원유에 대한 최대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의 이란 제재 복원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 견제에 러시아가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억지는 강경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를 이용한 것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여론 조작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중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남한은 물론 서방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이 친서방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최고의 견제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방수권법에서 북핵 협상용 베이스라인을 정하기 위한 북한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에 따른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통합, 주한미군 감축의 제한 등을 통해 볼 때 트럼프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